

與, 금감원 국감서 조직범죄 자금세탁·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보디아발 조직범죄 자금 세탁, 윤석열-김건희 관련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김보디아발 청년 취업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수익,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범죄조직이 가상자산,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서 자금세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관련 시장은 커지는데 돈의 추적은 점점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종이로 된 상품권이 손쉽게 세탁에 해당이 된다면 모바일 상품권은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수십 배 이상 빠르게 세탁이 가능한 세탁소 아니 대규모 세탁공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가 소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가서 별 품을 다잡고 해서 주가가 장중 5500원으로 뛰게 했다”며 “주가조작 주범들”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산은행과 수협이 오너리스크가 불거진 도이치모터스에 대출을 해줬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2월 수협중앙회 회장 선



한복의날인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민병덕,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복을 입고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가상자산·모바일 상품권, 범죄조직 자금 세탁수단 사용”

박범계 “尹 내외 주가조작 주범” 신장식 “도이치 대출 과정 의심”

민병덕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단기이익 몰두 MBK 행태 때문”

거운동이 있었는데 노동진 당시 후보가 조합장 5명에게 술자리와 성접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해경은 2023년 8월 무혐의 송지했다. 성매매 알선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무혐의 처분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카드사 정보보호 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롯데카드가 업계 최하위다. (대주

주)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영행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은 “법인 보험대리점인 ‘GA’가 굉장히 많은 양의 고객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중요한 직군인데도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우려가 크다”며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업계와 협의해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유배당 계약자들이 돌아가면 고스란히 삼성생명 자본금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계약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서서 일탈회계를 없애는 것이 회계 정상화”라고 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 8.5% 가량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면서 해당 주식의 시가와 취득원가의 차액을 부채 항목(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가로 평가시 삼성생명은 법적 한도 유지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상당부분 매각해야 한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 “경찰 혁신·변화해야”

“경찰 공권력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 신뢰...현 성과에 만족 안돼”

“수사 책임·공정·전문성 높여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체계 확립해야”

“경찰 중립성·민주통제 강화할 것...의료복지 등 복무 여건 개선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협업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베풀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며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교세 폭력과 스톱킹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진정한 민주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재복 입은 시민인 민주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대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경찰관 여러분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뉴스1

“염전노예사건 집유, 형낮아 눈의심”... 광주법원 국감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광주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염전 노동자 임금체불, 5·18민주화운동 피해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설법식 광주고법 법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착취 가해자인 염전주에 대한 양형이 국민 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질타에 대해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법원 판사들과 함께 양형 토의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돼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다 요양병원에서야 가족과 만났다.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일이다. 가해자인 염전주는 2019년부터 4년간 6600만원 임금을 지급하지

염전 임금체불, 5·18평화 등 형사재판 양형에 지적성 질의

친족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 처벌불원서 양형 반영도 질타

“법관 간담회 통해 개선” “변화된 국민 법 감정 맞춰 엄벌”

않아 기소했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적절하겠느냐”고 설 법원장에게 질의했다.

설 법원장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며 답변을 주저하자 주 의원은 “너무 형이 낮아 눈을 의심했다.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로 끝났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양형에 대해 사법부와 국민 감정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가폭력에 의한 광주시민의 학살인 5·18민주화운

동에 대한 끊임없는 편법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광주지법 장용기 법원장은 “개별 사건에서의 양형은 재판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 해달라”면서도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엄정 처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 간담회, 영상전담 판사 교육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 딸이 가족의 회유·강압에 의해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1·2

심 모두 양형에 반영했다”며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장 법원장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재판부도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을 양형 감경으로 인정하기는 했으나 징역 10년 중형을 내린 것도 바서는 양형에 많이 반영하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다만 “변화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춰 엄정한 처벌이 내릴 수 있도록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 소속 법관들과 깊이 논의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광주희생법원 준비 사항,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운영 비용 관련해 국가에 낸 부당이득금 소송의 지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들이 잇따랐다. /김병남 기자

☎062-525-9775

2025 장성 황룡강 가을 꽃 축제

황룡강 가을 花담 빛으로 물드는 이야기길

2025. 10. 18.(토) ~ 10. 26.(일)

황룡강변 일원

주최 : 장성군
주관 : 장성군축제위원회